

“금고형 이상 배제”... 공천 화약고

■ 민주 ‘공천 기준’ 진통

통합민주당이 부정·비리 전력자 등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안’ 마련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부정·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배제 방침을 확정할 경우 공천 탈락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태세여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을 고려, 대폭 완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사실상 공천 혁명이 물 건너갔다는 비난에 직면, 수도권 출신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공천 기준 마련 진통=박재승 공심위원장은 4일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뇌물, 알선수제,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법,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비리 전력에 있는 인사들의 공천 배제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계륜 사무총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 배기선·이영희 의원을 비롯, 이호용·김민석 전 의원 등 개인비리와 대선자금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인사들은 전원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외부 공심위원과 당 출신 공심위원들간에 고성아 오가는 등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박 위원장과 공천배제 기준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 대표는 공천 배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박 위원장이 밝힌 공천 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의 틀을 유지하는 데는 전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혁을 하려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그게 공천개혁 아니겠느냐”고 말해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공심위는 공천 기준 마련

기준 완화때 ‘개혁 공천’ 힘빠져 수도권 악영향

김홍업·박지원씨 등 강력 반발 무소속 출마 불사

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밤 늦게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심각한 후폭풍 예고=공심위가 어떠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재승 위원장이 밝힌 대로 공천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등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공천탈락 위기에 몰린 해당 인사들은 “공심위가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마치 죄인을 심판하듯 할 수 있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공심위는 억울한 사안을 경청하고 밝혀줘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회색양을 만드는 데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홍업 의원 측은 “이미 유권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도 사면복권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4일 저녁 국회 대표실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공천기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심위, 30% 물갈이 발표 언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기준 마련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30% 공천 배제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과연 언제 발표될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심위의 명단 발표가 늦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공천 배제 의원들의 ‘살생부’가 지역 정치권에 횡행하는 등 악성 루머가 난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단 통합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배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명단은 오는 9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배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충분한 자료 검토 및 내부 논의를 마치고 오는 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5일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천에서 배제되는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

신중에 신중... 9일께 발표 가능성

미확인 ‘살생부’ 횡행... 광주 공천배제 숫자도 관심

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늦어도 6일께에는 공천 배제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천 배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호남 물갈이’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되는 광주지역 현역의원들의 숫자도 관심 사항이다.

공심위가 호남지역 현역의원 30% 물갈이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와 전남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북 3명, 광주·전남 6명이 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공천에서 배제될 광주지역 현역의원은 2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염동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현재 광주지역 현역의원들의 숫자는 6명에 불과하고 7명을 적용한다 해도 30%는 2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의원 수를 떠나 지역 및 정치적 등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심위가 광주와 전남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광주와 전남의 공천 배제 의원 수는 각기 3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자체도 조직개편·인력감축 불가피

광주·전남 공무원도 쪼뼛다

재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지자체에도 조직개편·인력 감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이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지켜보던 ‘방관자’였으나, 이른바 ‘중앙 정부발’ 퇴출 여파가 지자체에까지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확정된 ‘초과현원’ 3천427명은 사실상 퇴직·전직 대상에 올라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본청 정원이 2천868명, 3천351명으로 감원보다는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의 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자체 기관이 실현될 경우 인력과 업무가 광주시와 전남도로 옮겨와 필연적으로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기관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9개 부처, 65개 지방청, 194개 사무소·출장소 등으로, 4천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인력만 해도 2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지방국도관리청, 지

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관리청, 통계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등과 산하 사무소·출장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려 지난 3일 단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 개편안도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본청의 조직을 13실국 48과 191담당에서 12실국 44과 163담당으로, 1국 4과 28담당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확정, 본청 인력 106명을 감축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인력구성과 조직운영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슬림화 여파가 지자체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자체가 지향하는 고유 시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을 정부 방침만으로 무작정 손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관한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직개편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자체의 특성과 고유사무를 고려할 경우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전남 국회의원

호남서 불출마해야”

지역시민단체 주장

광주·전남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4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무능함과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남지역에서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총선출마자에게 드리는 촉구’라는 성명서를 통해 “17대 국회에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 현역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호남지역에서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참여정부 수혜자인 장·차관급 후보들의 지역 출마에 대해서도, “당선 가능성만을 노렸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부패비리 전력자와 지난 16대, 17대 총선을 통해 시민단체가 언급했던 낙선·낙선운동 대상자들도 정치 발전을 위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 조이트레볼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가 17번지 2층
대표전화 (062) 234-3222

신입/중고/부동산

- 신입/중고/부동산 309,000
- 신입/중고/부동산 359,000
- 신입/중고/부동산 429,000
- 신입/중고/부동산 499,000
- 신입/중고/부동산 599,000

이벤트 특가!
편의점 4성급호텔 사용!!

- 상대 / 영주 / 소주 4월 399,000
- 복합 / 편리한실 / 투숙제저세게 4월 499,000
- 599,000
- 699,000

무엇보다도

- 639,000
- 689,000
- 1,590,000
- 1,890,000
- 719,000